

고르바초프의 동구라파 정책

河 龍 出*

<目 次>

- | | |
|----------------------|---------------|
| I. 序 | 2. 동구체국의 개혁 |
| II. 스탈린, 후르시쵸프의 동구개혁 | 3. 바르샤바조약기구 |
| III. 브레즈네프시대 | 4. 소련-동구 쌍방관계 |
| IV. 고르바초프의 대동구정책 | V. 맷음말 |
| 1. CMEA | |

I. 序

2차대전 이후 동구라파의 공산화에 따른 소위 소련 陳營의 형성은 그 이전에 비해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2차대전 이전의 사회주의 운동은 그야말로 운동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소련 이외의 사회주의 국가의 형성을 보지 못하였다. 1919년 1차대전을 둘러싼 유럽 공산당과 사회당의 민족주의적 편향으로 의해된 제 2인터내셔널의 계승자로 탄생한 제 3인터내셔널(Comintern)은 그 기본 성격상 정권을 잡지 못한 미수권 공산·사회당의 소련에 의한 지령실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우기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가 구체적으로 정책적 발현을 시작한 1920년대 말부터는 코민테른의 국제주의적 색채는 다시 약화되는 한편 소련의 국가이익의 집행 수단화하였다. 이는 사실상 국제공산당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였다. 소련 내부의 사회주의 전설의 진행과 2차대전의 양상이 소련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동구라파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스탈린은 1943년 코민테른의 종식을 결정하였다.

2차대전 이후 동구라파—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의 소련권 편입은 소련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첫째, 군사·안보 차원에서 소련의 동구

* 서울대 사회대, 외교학

라파에 대한 통제는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부터 소련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지역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전 직후 냉전시기 동안 군사·안보적 차원에서의 동구라파의 중요성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전통적 군사개념이 많이 수정된 점이 없지 않은 오늘날에 와서도 그 가치가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소련이 최우수의 31개 사단 병력을 동구 제국에 배치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동구라파는 소련에게 있어 공산주의권을 최초로 형성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적 국제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확대의 성공 사례로써 동구라파는 상징적으로 소련의 이데오로기적 성취를 나타내며 정책적으로 사회주의의 국제적 확대와 소련의 외교정책 수행상의 동구라파에의 역할의 부여와 그 증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역할이 적극적 의미를 띠고 있다면 소극적으로 동구라파는 서구라파등으로부터 침투하는 이데오로기의 영향을 막아 소련의 국내체제를 보호하는 이데오로기적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세째, 동구라파는 소극적 의미에서 소련의 군사적 역할 이외에 적극적으로 서구, 또는 서구의 일부지역 즉 전통적으로 서독등에 대한 군사적 침략의 근거로 보여져 왔다. 이에 대한 타당도는 물론 개인의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베를린봉쇄등의 실패와 NATO의 강화등에 따라 군사적 침투전략의 양상은 크게 그 의미가 상실되었으나 현상유지를 바탕으로한 소련의 서구에 대한 외교적 이니셔티브, 조작 등은 소련 외교정책의 중요부분을 이루어 왔다.

끝으로 동구의 경제적 중요성이다. 2차대전 이후 전쟁보상의 명목하에 많은 자원과 물자가 소련에 의해 반출되어 소련의 전후 복구에 큰 역할을 한 역사적 사실 이외에 동구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동구가 소련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와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비록 동구가 소련의 에너지와 원자재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동구는 기계제품, 소비재 등의 공급원이 되어왔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동구는 소련에게 경제체제의 시험장으로서 경제개혁의 실험과 이의 정치적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¹⁾

이와 같은 동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2차대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의 최초

(1) 동독의 콤바인개혁, 혁가리개혁 등은 소련 경제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의 지도자로서 소련에게 안겨진 과제는 어떻게 세로이 등장한 사회주의 제국인 동구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소련과 동구와의 관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르바초프의 동구라파 정책의 특징과 변화에 그 주된 촛점을 두게 될 것이다.

Ⅱ. 스탈린, 헤르시초프의 동구개혁

스탈린 하의 소련과 동구 관계는 “강요된 외연적合一”의 관계였다. 이러한 monolithic union의 유지를 가능케 했던 요인으로는 첫째, 동구라파 제국의 정권들이 2차대전 이후 미·소의 영향권 분리 과정에서 소련의 지원에 의해 성립된 정권들이었다는 것이다. 시기와 방법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소련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에 의해 정권이 수립되었다. 즉 Seton-Watson에 의하면 소련이 동구에 괴뢰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은 첫단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좌파와 좌파의 중간 노선과의 연합을 폐하는 데, 대체로 공산당과 사회당의 연합이었다. (Seton-Watson, 1953:247-248) 두번째 단계는 “위장 연합”의 단계로 형식적으로 다수당이 권력을 공유하고 독립된 조직의 활동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장된 연합의 공산주의 집단에 의한 장악이다. 사회당에 흡수되고 모든 정치적 활동과 의회의 기능은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소련은 군사력에 의한 위협, 간접적인 정치 간섭 및 경제적 수단을 통해 초기 공산정권 수정에 간여하였다.

스탈린의 동구 통제 수단 중 중요했던 것은 정치엘리트의 교체였다. 스탈린은 자신과 소련에 편향적인 인물을 확보, 권력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동독의 울브리흐트, 헝가리의 라코시, 불가리아의 디미트로프, 폴란드의 비어루트, 체코의 코트발트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동시에 각종 고문단과 이를 통한 소련과의 잣은 상의 및 자문, 대사를 통한 내정의 간섭, 당대당의 긴밀한 접촉, 정부기관—특히 내무부—에의 직접적인 침투, 공산동구국가들의 타 세계와의 접촉의 제한, 동구권 국가들 상호 간의 수평적 접촉을 억제하여 소련과의 수직적 양자관계에 의존케 하였다.⁽²⁾

(2) I.Z. Brzezinski. *The Soviet Bloc*(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9), Chapter 6. 참조

스탈린하의 소련과 동구의 관계는 한마디로 소련내지 스탈린 중심적이었다. 동구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소련에 종속되어 스탈린의 소련 내에서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동구의 국내 경제질서였다. 동구의 각국은 스탈린적 경제개발 원칙인 중공업 위주, 농업부분의 중시, 양적 성장 중심의 개발 전략에 의해, 소규모의 소련식 오타키(autarky)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소련과 동구라파 관계를 관장하는 기구는 거의 그의 미를 상실하였다. 1943년 Comintern의 해체 이후 1947년 성립된 Cominform은 형식적 기관으로 전락하였고 사실상 스탈린의 정책에 따라 동구 각국의 정책도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1953년까지 지속된 동구의 스탈린 체제化는 유일한 최초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소련의 지위와 스탈린 개인에 대한 동구 엘리트의 의존에 의해 유지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이 없는 스탈린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스탈린 사후 소련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은 일관된 동구정책을 어렵게 만들었다. 소련 내부의 국내사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던 동구라파의 실정은 소련과 동구 관계와 동구라파 정권들과 사회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소위 “新路線”(New Course) 정책은 소련 내부의 일관된 정책의 결여로 인한 상황대응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후르시쵸프의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시작된 반스탈린 운동과 이의 기초가 된 후르시쵸프의 20차 전당대회에서의 반스탈린 비판 연설은 스탈린 체제의 전면적 부정을 의미하였고 이는 곧 동구 전체에 적잖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 후르시쵸프의 비밀 연설에 나타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은 동구의 스탈린 추종자들에 대한 정치적 위협을 의미하였다. 동시에 스탈린 개인숭배에 기초한 관료적 독재정치의 비판은 동구 정치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이는 공산세력이 약한 동구 제국에 위로부터의 공산정권의 강요가 초래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1956년의 헝가리, 폴란드 사태를 들 수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 사태는 스탈린 하에서 헝가리와 폴란드의 국가이익을 희생한 채 소련의 영향력을 받아 왔다. 즉 “국제주의”的 희생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는 “민족공산주의”的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련에게 있어서 민족공산주의의 출현은 사회주의 진영의 관리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였다. 특히 후르시쵸프의 “사회주의 전선에 있어서 부수적 방법”의 가능성 인정은 민족공산주의를 제창하는 동구 제국의 이익과 이것이 필연적으로 가져 오는 다양성과 다양성이 가져 올 일관적 통제의 어려움을 조정해야 한다는 미묘한 균형의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또한 소련의 국내 정치·경제개혁과 동구라파의 통제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이와 같은 반비례 관계는 소련에게 어려운 딜레마를 안겨주는 것이었다. 즉 소련 국내의 개혁은 동구 제국의 개혁세력들을 고무하게 되고 이는 다시 반소적 경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소련으로서 진영의 결합력 증대와 동구 제국의 체제의 활성화를 조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동구 제국과 소련파의 사회주의 전선 정도의 차이와 동구제국내의 다양한 발전정도에 의해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된다.

후르시쵸프는 이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는 스탈린의 진영결합 위주의 방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동구 제국의 활성화와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사회주의 제국간의 이데오로기적인 합의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각국의 특수 상황을 인정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평등을 제창하고 소련으로부터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합의를 중시하여 경직화되었던 바르샤바조약기구 WTO의 활성화와 1955년 설립된 「상호경제협력체」(COMECON)를 통해 참여를 통한 의사 조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시대와 같은 일관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하에서 이데오로기에 관한 원칙의 합의⁽³⁾가 구체적 상황에서의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더우기 중·소 분쟁의 시작과 제2차 소련·유고 관계의 악화, 헝가리·폴란드 사태 등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케 하였다. 특히 중·소 분쟁은 이데오로기 해석의 다른 복수적 근원을 제공하여 약소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확

(3) 후르시쵸프의 이데오로기 합의를 위한 노력의 예로는

“Declaration of the Conference of Representatives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of Socialist Countries,” Moscow, November 22, 1957.

“Statement of Representatives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Moscow, December 6, 1960,” Robert H. McNeal, International Relation among Communist (New Jersey: Prentice Hall, 1967)

대되었다. 루마니아, 북한, 알바니아 등의 자주노선은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경제협력관계 차원에서도 스탈린식의 자급폐쇄 체제가 아닌 새로운 “사회주의 분업”에 입각하여 각국의 특성과 이점을 살린 분업관계를 코메콘을 통해 실시하려 하였다.⁽⁴⁾ 그러나 동구내의 경제발전의 불균형은 사회주의 분업에 관한 설치된 지지계획들을 어렵게 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농업화가 낮은 나라로 분업에 참여할 경우 산업화의 가능성성이 어렵게 되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후르시초프의 반스탈린운동과 새로운 불력관계 조성 움직임을 동구국가들의 정치·사회 경제적 여건의 고유성을 인정, 사회주의체제 개혁 배경을 이루었다. 개혁의 정도와 내용은 각국의 사회주의 정착 정도, 엘리트의 안전성과 자신감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었다. 동독과 평가리에서는 보다 성과있는 개혁이 실시되었고 불가리아에서는 거의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체코의 정치적 개혁 움직임은 1968년 체코침공 사태까지 이르렀다. 후르시초프의 개혁 움직임은 1964년 그의 축출이 후에도 계속되어 동구에 관한 1968년 종말을 보았다고 볼 수 있다. (Brown, 1975:13)

III. 브레즈네프 시대

브레즈네프 정권은 체코 침공 후 소련과 동구 관계를 재정비해야만 했다. 동시에 서방과의 네탕트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장이 요청되었다. 또한 악화되기 시작한 중·소 관계는 급기야 국경분쟁에 이르게 되어 동구국가들의 소련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위의 모든 요인들이 동구 제국의 다양성보다는 소련—동구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체코침공 이후 등장한 소위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사회주의국가들의 제한주권을 선언하였다. 즉 사회주의국가들의 국내문제는 어느 경우 국내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그 내용의 새로움에서 보다는 스탈린의 죽음 이후 후르시초프가 내세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다양한 길에 쇄

(4) 이에 관한 후르시초프의 연설.

기를 박았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 의미가 있었다.

서구와의 데탕트 정책의 추구는 점차 하락하는 경제 효율성을 서구의 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소련 및 동구 국민에게 소비재 욕구의 충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서구와의 접촉의 증대와 이에 따른 이데오로기적 타락의 가능성과 이의 정치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결속이 필요하였다.

또한 계속 약화되는 중·소관계와 동구 일부 국가들—알바니아, 루마니아 등—이 중·소분쟁을 대 소련 교섭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미국의 중공카드사용을 약화 내지는 방지시킬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소련은 체코사태의 수습과 이에 따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1969년 모스크바에서 75개 공산당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소련은 1960년 후르시초프가 모스크바회의에서 한 것과 같이 소련의 우위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특히 중공에 대한 비난을 포함, 체코사태의 평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통일된 의견의 도모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회의의 최종 결의안은 1960년의 결의안이 소련의 이데오로기적 위치의 우위성을 형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1969년의 결의안은 “모든 당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제공산당운동에 지도적 중심이 없는 시점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들의 자발적인 조정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라고 하여 소련 공산당에 의한 강요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소련의 위치에 의한 모든 문제에 대한 소련 의사의 관철이 가능한 상태에서 일반 원칙 이외에 구체적 문제의 발생에 따라 소련과 동구 제국사이에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이는 동구 제국의 협상권의 상대적 증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상호경제협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원칙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경우 동구라파 제국의 방위부담의 경감과 전략문제에 관한 기구내의 상호협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대체로 6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다. 연합군(The Joint Armed Forces)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채택, 연합사(The Joint Command)와 연합참모부(The Joint Staff)의 개편, 국방장관위원회, 군사위원회, 군사기술 조정위원회 등 3개의 새로운 위원회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과 규정의 내규를 열거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새 조직의 등장은 동구 제국의 최소한 명목적 참여로 기회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조직의 증대는 군사문제 이외에 동구권의 외교정책의 통일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특히 「정치협의위원회」(Political Consultation Committee)의 교정책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예컨대 연합군에 관한—은 많은 애매성을 내포하여 소련과 동구 제국이 각기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⁵⁾

상호 경제협력위원회의 경우 후르시초프의 경우와 같이 한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을 통한 국제분업의 강요를 전제로 한 방법과 시장 논리의 도입에 의한 무역·경제협력의 촉진 방법 등 두 가지 방법 사이에서 동구 제국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러한 상충은 어느 한 방향으로 낙찰되기 보다는 한국가적 계획의 일반적 강요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 구조에 의한 조정도 아닌 개발 국가들 간의 조정의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팔목할만한 것은 과거의 만장일치 제도에서 각 국가의 자발적인 이익의 고려에 입각한 원칙(Interestedness Principle)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어느 구성 국가도 CMEA의 새로운 사업에 참여토록 강요되지 않고 동시에 CMEA의 결정은 관심을 표시한 국가만 구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소련의 결정에 모든 구성원이 따르는 경우도 없게 되었으나 동시에 만장일치 원칙 하에서 거부권을 가질 수 있었던 가능성이 배제되게 되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각국의 경제계획의 자발적 조정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에 입각한 경제협력 체제 미비는 경제협력의 촉진을 제약하고 있다. 즉 가격결정의 문제, 换率과 Convertible Currency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였다. 또한 비구라파셴의 베트남, 쿠바와의 협조 문제에 관해 소련과 동구권 제국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코사태 이후 1970년초까지 새로운 조직 개편등을 꾀했으나 1970년 후반에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당 제1서기들의 영수회 담체제가 확립되고 이를 통해 외교정책 문제가 조정되었다.

그러나 테탕트의 기본 목표였던 서구자본·기술의 도입에 따른 경제개혁

(5) 연합군의 명령체통의 파견국으로부터의 독립여부에 관해 소련은 독립된 것으로 루마니아의 경우 원래 파견국과의 협의를 필요한 것으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의 시도가 1970년 후반부터 서구 경제의 침체에 따라 서구 경제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의 대표적인 경우가 폴란드사태였다. 동시에 미·소 레탕트의 악화는 소련과 동구의 서구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초래하였다. 더우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소련과 동구간의 의견차를 심화시켰다. 동구라파내에서 불가리아, 동독 등 소련의 입장에 완전 동조하는 그룹,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교적 협조국, 루마니아 같은 독자노선 국가등으로 나뉘어 지게 되어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에 부딪쳐 소련의 동구관리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IV. 고르바초프의 對 동구정책

이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소련의 동구정책은 소련의 대 미국·서구정책과 반비례의 관계가 있어 왔다. 즉 서구와의 레탕트가 가져 올 동구—소련 관계에 대한 와해적 영향을 어떻게 조화하느냐의 문제이다. 둘째, 소련 국내 개혁에 따른 동구내의 개혁의 한계 설정이다.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위의 두 질문은 소련에게 동구정책上 統合 (Cohesion)과 동구의 정치적 활성화(Viability)의 조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여 왔다.

고르바초프는 그 이전의 어느 소련 지도자보다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동구내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인가? 소련내의 개혁이 동구에서의 정치적 문제를 초래했던 과거에 비추어 또한 서구와의 신데탕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구 통제 문제는 어떠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고르바초프 이후 동구라파 정책의 전개를 살피고 과거의 정책가정과의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르바초프는 취임 이후 줄곧 동구관계의 개선을 주장해 왔다. 이의 징표로 그는 소련의 동구에 대한 통제와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상징이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억제하여 왔다. ⁽⁶⁾

(6) 사회주의적 국제주의(Socialist Internationalism)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Proletarian Internationalism)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전자는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후자는 정권을 잡지 못한 공산당과 관계를 지칭할 경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취임 초기 구체적으로 동구에 대한 정책과 수립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 있다. (Dawisha and Valder, 1987:1-5) 이는 고르바초프 초기 서로 상이한 동구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논문의 발표를 통해 더욱 명백해졌다. 라르마닌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집권노동당 및 공산당 연락부의 제 1 부부장으로 브라디미초프라는 가명 하에 전통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포기,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통적 강경노선을 지지하였다. ⁽⁷⁾

이에 반해 유리노프파신은 세계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의 과장으로 “민족적 이기주의와 제국적 권력의 입장을 척결하는 비법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족국가 이익이 사회주의 국제체제 하에서도 상존하고 있으며 때때로 모순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이러한 민족적 이익을 그것을 초월하는 원칙에 종속시키거나 지배·복종관계에 넣으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이에 따라 지배주의나 해계 모니즘을 배격하고 새로운 관계를 위한 규범의 정립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견해는 고르바초프의 동구정책이 확실해짐에 따라 후자의 견해가 우세하게 되었으나 제2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 전후까지 이러한 혼란은 계속되었다.

고르바초프의 27차 전당대회에서의 정치연설은 어느 때보다 동구에 대한 언급이 간략함에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27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 운동과 이의 당면과제의 광범한 다양성 역시 현실이다. 때때로 이는 다른 의견을 낸다. 소련공산당은 공산당 사이에 항상 의견의 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생각치 않는다.”

“상호 경험에 의해 존중하는 태도와 실제 경험의 응용은 사회주의 세계에 거대한 가능성을 이루고 있다.”

그는 역시 혁명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코민테른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사회주의 국제관계가 전환점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제사회주의 실천 원칙을 제시하였다.

(7) 이후 라르마닌의 해석은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조건적 완전한 평등

—일국에서 집권당의 국가 업무에 대한 책임, 당의 국민에 대한 애국적 봉사

—사회주의 공통 명분에 대한 관심

—상호존중, 타 공산당의 실험과 성취에 대한 신중한 태도 : 자발적이고 다양한 협조체제

—평화공존 원칙의 엄격한 준수

그는 계속해서 소련 모델의 강요적 우위성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날 사회주의 세계는 모두 민족적·사회적 변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유용하고 좋은 현상이다. 우리는 단합이 합일이나 혁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 만족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에 의해 모방될 유일한 모델사회주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제국은 특정 모델의 채택과 이의 행동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기 보다는 구체적인 성과에 의해 모델의 장·단점을 평가받게 된다.”(Pravda, 1987.11.3) 이는 각국이 각국의 특수성에 기초와의 독립된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짐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다양성의 안정과 불력의 통제 사이에 존재했던 반비례 관계, 즉 다양성을 인정함에 따르는 통제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려는 것인가? 고르바초프는 이에 대해 첫째, 우방사회주의 제국의 지도자들 간의 다른 실무 회담 제도를 통해 국내·국제정치에 관한 제반 문제를 토의하는 장치를 제의하였다.(Gorvachev, 1987:165)⁽⁸⁾

둘째, 이의 구체적 표현으로 CMEA 내에서 각국의 독립적 참가 결정에 의한 계획과 사업의 조성을 제창하였다.

세째, Warsaw조약기구내의 외교정책의 조정과 참가국가의 정책 이니셔티브의 권장이다. 다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CMEA와 Warsaw조약기구의 최근 활동을 살펴보기로 하자.

(8) 이에 관련 고르바초프의 동구각국 방문과 동구국가 원수들의 모스크바 방문이 1985년 이래 활발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CMEA(상호경제원조회의)

CMEA는 1955년 창설된 이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관계를 조정해 왔다. 초기 동구와 소련으로 구성되었던 CMEA는 현재 월남, 몽고, 쿠바 등 비동구권 국가를 포함하게 되었고 유고도 특별한 협정에 의해 참석한다. 또한 모잠비크,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이디오피아, 남에멘 등이 옵저버로 참석한다.

CMEA의 경제관계는 제국주의 형태인 강국의 산업재 수출과 약소국의 원자재 수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소련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을 주로 공급하고 동구는 소비재, 기계류 등을 소련에 수출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소련은 과거 세계 시장에서의 원유 가격보다 $\frac{1}{3}$ 이하의 가격으로 동구에 원유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석유채취 단가의 증가—시베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와 70년대 말 이후 원유가격의 하락은 소련에게 의환보유고의 압박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제반 요인은 소련이 전통적인 역할에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고르바초프는 CMEA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시도를 행해 왔다.

고르바초프의 제반 정책과 관련된 CMEA의 구조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CMEA 내에 존재하는 상품의 질적 격차를 들 수 있다. 계획경제 하에서는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하기보다는 할당된 계획치를 완수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게 되며 이는 상품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동구파 제국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저질의 상품을 소련에 수출해 왔다. 소련은 가중되는 에너지개발 투자에 동구 제국의 투자 참여를 요구하는 동시에 증가된 투자에 의해 생산되는 에너지코스트에 기인한 생산성의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동구 제국의對소 수출상품의 질적 제고를 요구하게 되었다.

동구 제국은 반면 평균 이상의 품질을 가진 상품은 서구 시장에 수출하여 필요 외화를 획득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동시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서구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 또한 이와 같이 획득한 외화는 소련으로부터의 에너지공급량의 부족에 대비해서 시장에서의 석유구입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 구조의 결여는 소련, 동구간의 경제협력에서 끊임없는 막후통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즉 가격 결정 구조의 결여는 현물을 둘러싼 상호 협

소련의 수출과 최대한의 수입량 확보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소련은 동구로부터 가능한한 유용한 물자의 최대한 확보를 원하고 있는 바 이는 투자참여·자재, 노동 등의 형태로—와 수출상품의 양과 질의 확대·개선요구로 나타난다.

동구는 가능한한 그들의 소련 요구에 대한 충족 역량을 은폐함으로써 소련으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하려 한다. 합작투자의 경우 이는 동구 멤버들의 투자의무의 불이행등으로 나타난다.

1979년 완성된 소유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합작투자 사업의 경우, 동구를 천연가스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없었고 공급의 가능한 경우 현상적 대소 수출의 회생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동구의 소련내 투자참여는 동구의 대 서구 기계 구입 이외에 실제로 형식에 불과했다.

동구는 여전히 소련을 저질품 수출의 쓰레기장으로 간주하고 있고 소련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서구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동구 상품의 질적 수준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소련은 이와 같은 제고된 기술 수준에 의한 상품의 수입을 원하고 있다.

1984년 모스크바의 경제 정상회담에서 소련은 동구에 강한 압력을 넣었다. 동회의 콤黝니케는 소련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동구의 수출 산업구조의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Radio Free Europe Research, 1985. 2. 4:5-6)

고르바초프 하의 CMEA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 첫째, 1976~80년 CMEA 종합 프로그램의 실패 요인은 서구기술에 의 의존으로 서구 경제의 경기 변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서구·자본·기술 의존을 극소화하는 방향에서의 CMEA협조체제의 구축이 요청된다.

둘째, 지속적인 소련의 동구에 대한 에너지원의 공급과 동구의 對소 수출 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의 모색이다. 이는 에너지 낭비적 경제구조의 개편과 에너지원의 개발 및 동구 경제구조의 개편을 통한 품질 향상의 도모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병행하여 시장구조에 기초한 가격체제의 적정화 노력이 CMEA 차원에서 필요하다.⁽⁹⁾

고르바초프의 CMEA협력 강화 움직임은 1985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9) 기존의 가격결정 기구는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CMEA 집행위원회 116차 회의에서 볼 수 있다. 동 회의에서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생산분야에서의 적접연계와 협업체제의 구축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제반 조치의 대강을 설정하였다. 이의 주요한 내용으로 협작을 위한 새로운 경영조직 형태의 개선에 관한 방향 설정이 있다. 이 새로운 조직을 세계 수준에 맞는 기술, 기계, 장비, 생산공정의 도입을 위한 체제이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1986~1990년까지의 표준화를 위한 협력계획이 채택되었다. 기술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된 관심이 협력이 필요한 우선순위 분야의 설정 특히 전자, 로보트 산업 등에 돌려졌다. (Pravda, 1985. 9. 27)

고르바초프의 CMEA 협력 강화 움직임은 1985년 6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40차 CMEA 정기회의에서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동 회의에서 향후 15년~20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고려가 밝혀졌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과 생산에 있어서의 CMEA내의 협조를 위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Pravda, 1985. 6. 29)

동 회의에서 기계공업, 전자부문의 육성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이를 위한 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위계부문에의 융통성 있는 생산체계의 도입을 규정하였다. 이 생산체계는 대규모의 고도의 자동생산체계의 생산, 수동, 저장분야에의 도입, 산업 로보트 및 자동화된 관리 디자인, 체계의 도입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의 실시를 위한 CMEA 회원국의 국내경제 구조의 변화를 설정하고 있다.

여론, 전력, 원자재 생산을 위한 CMEA내의 협조 실적과 계획에 대한 토의가 행해졌다.⁽¹⁰⁾ 이에 관련 에너지 소비의 절약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2000년대 까지 CMEA 회원국간의 원자재 절약에 관한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1986~1990년 까지 CMEA내의 상호 교역을 계획수집을 위한 각국간의 경제계획의 조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생산성이 높고 최신의 기계, 설비의 생산과 CMEA내에서 공급된 상품의 질적 향상에 주의가 기울여졌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과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

(10) 예컨대 Kriv:Rog Mining and Concentrating Comsire, Khmelnitsky Atomic Power Station의 건설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음을 발표, 남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시설 보강이 전력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송전을 위한 건설 계획이 언급되었음.

이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에 관한 생산의 촉진이 강조되었다.

1986년 12月 17日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 41차 비상 CMEA 회의에서 「2000년까지의 CMEA 회원국간의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자리에서 소련 수상 리지코프는 이전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그는 과거 CMEA내의 과학—기술협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이의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을 역설하였다. (Pravda, 1985. 12. 8-1-4)

그는 채택된 프로그램이 회원국의 1986~90년 5개년계획에 반영될 것을 주장하고 소련이 채택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본지도노선」⁽¹¹⁾ 초안에 반영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는 소련의 국내 경제개혁이 이 CMEA와의 경제협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련은 CMEA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해 소련내에서 가장 권위있고 고도의 능력을 갖춘 연구소, 디자인, 연구—생산협동체를 지명하여 참가토록 하였다. 또한 이렇게 모인 연구생산 기관들 중 지도기관(Head Organization)을 지명하여 각국들간의 직접연계의 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소련내에서 새로운 생산조직인 「부처간 과학·기술 복합체」가 신설되고 있다. 이렇게 신설된 복합체들은 대부분 CMEA의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지도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특히 우선순위 영역—개인컴퓨터, 금속 공업,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이와 같은 복합체가 세워지고 있다. 소련 정부는 이러한 지도기관들에게 여타 CMEA의 상대 기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리지코프는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협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통합된 계획에 의한 「합작연구, 생산연합기업소」(Joint Research-and-Production Association) 형태⁽¹²⁾와 합작기업 형태를 제시하였다. 3가지 형태 간의 차이에 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있으나 지도기관과 나머지 2가지 형태의 차이는 전자가 2개 이상의 복수 국가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국가별, 기능별 규모의 분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 나머지 2개 형태는 양자간의 관계

(11) 1987. 6에 확정

(12) 리지코프는 소련과 불가리 사이에 2개의 이와 같은 연합기업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로보트 산업분야에 이의 도입을 위한 「Interrobot」의 구성계획도 언급되었다.

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들간의 차이점은 연구·생산시설의 병합문제와 공동계획에 의한 통제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力點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면 5대 우선 사업중 전자산업에서는 1초에 100억 이상의 작동이 가능한 새세대 컴퓨터의 생산을 위한 기초산업과 체계 고안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자동화 계획에 의하면 자동화된 기계생산, 자동화된 공장, 자동화 디자인과 기술과정의 제어로보트 콤플렉스 등에 역점이 두어지도록 되어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석유 의존도를 원자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장비·시설의 신규 생산, 리액터와 열공급 스테이션의 개발 및 개선을 추진한다. 신자재와 기술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그램은 세로운 유기체 자료의 생산에 주력하고 레이저 프라스와, 멤프 등 새기술의 도입 활용을 적극화한다. 바이오테크노로지 분야에서는 바이오테크노로지의 연구 결과의 농업, 미생물학, 공해위생분야의 도입을 촉진하도록 한다. 또한 사료, 새로운 영양 합성품의 생산, 세로운 육종법의 개발 등이 강조되었다. (Pravda, 1986. 12. 29)

지도기관 형태의 협조체제로 지목되고 있는 「국제로보트」(Interrobot) 생산 활용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로보트 산하의 CMEA 회원국들은 새로운 개발계획을 한 채널로 일원화한다. 회원국들은 공동목표의 집행을 위해 각국에 Interrobot에 참여하는 지도기관으로 각국에서 관련된 기관을 통합하는 통상기관을 구성한다. 소련의 경우 Interrobot의 지도기관으로 기계 및 공구성과 同省하의 금속 Cutting 공구 연구소가 이를 담당한다. 이 산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이 참여한다.

이처럼 국가인 강력한 콤플렉스는 연구, 디자인개발, 로보트가 사용된 제반 메카니즘의 개발과 실험, 대량생산을 위한 준비 등을 담당한다.

각국내의 이러한 기관들은 채택된 협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공동협업체를 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소련과 체코 간에는 소련·체코 국제과학기술협회가 다국간 프로그램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Interrobot의 예비 국제분업이 작성되었다. 불가리아는 코-팅과 기계 조작과 전자제품의 조립에 필요한 로보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고 헝가리의 경우 제어와 정밀측정을 위한 로보트의 생산에 주력할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용접을, 체코는 염색과 조립공장을, 소련은 금속공업과 캐스팅

을 위한 로보트의 생산을 전담한다.

새로운 로보트가 생산되었을 경우 국제 연구, 생산 연합회의 이사회는 동로보트의 최적 생산국이 어디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이 경우 생산자는 특정 국가의 기업소가 될 수도 있고 국제적 합작기업이 될 수도 있다. (Pravda, 1986. 12. 29)

리지코프는 92개 이상의 과제에 연관되어 있는 개발 프로젝트가 3년 이내에 새로운 부품과 기술의 도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간의 시의적절한 다국간 조약의 체결이 요청됨을 지적하였다. 그는 실제로 이후 6개월 이내에 67개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84개의 기존 협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10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3차 CMEA 임시회의에서 리지코프는 소련의 입장과 CMEA의 협조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리지코프는 1985년 이래 소련과 동구간의 무역조건이 물량면에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치면에서 정체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소련의 경제와 동구 및 기타 CMEA 회원국간의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종래의 무역중심 관계에서 연구와 생산관계로의 이전을 역설하였다.

그는 소련에서 省과 기업들의 대외경제 활동을 위한 확대가⁽¹³⁾ 동구와의 경제관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동구 제국의 유사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는 소련 국내 경제개혁의 성패와 동구와의 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동시에 동구 제국의 경제개혁의 성공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협력의 수준은 과거와 달리 3가지 法規에서의 국가별 계획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정부간, 부처간, 기업간의 수준에서의 협력을 말한다. 동시에 CMEA의 구조의 개편이 제청되었다. 리지코프는 무작정의 행정기구의 확대를 반대하고 상설조직과 임시조직을 병합하여 투자는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 설치하도록 하였다.

리지코프는 경제협력과 통합의 촉진을 위해 가격구조와 금융 및 환율제도

(13) 소련은 기업들과 省들이 합작기업, 국제기업 연합소 등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권한과 1회에 관한 물자의 공급과 마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상품의 구입을 위해 청산결재용 루블의 사용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그는 협행 결재용 루블의 화폐기능의 발전과 환화와 함께 각국 화폐의 도입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생산관계와 합작투자, 과학, 기술협력을 위해 각국 화폐의 상호교환과 결재용 루블의 교환성을 제도화할 것에 동의를 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상호교환성 화폐에서 동구권 전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단일 화폐의 설치가 제안되었다.

리지코프는 또한 1991~2005년 까지 국제사회주의 분업이 집단개념(Collective Concept)에 기초할 것에 대한 합의를 지지하였다. 집단개념에 기초한 계획과 협조의 의미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각국의 독자적인 계획과 조정 차원에서 CMEA 전체의 계획에 기초한 자발적 조정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스크바 회의에서 논의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비유럽 CMEA 회원국과의 협조 문제였다. 원래 동구라파 위주로 성립된 것으로 경제발전의 수준이 다른 쿠바, 몽고, 베트남의 영입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CMEA 회원국은 비 구라파 회원국과의 협력을 위한 특별종합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모스크바 회의의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소련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CMEA 구조 개선의 난점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불가리아는 경제통상의 원칙에 찬성하면서도 경제의 재개편 과정이 용이치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단계적 수행을 주장하였다. 즉 경제 통합에 상응하는 회원국 국내 경제의 개선과 개편과의 관련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Pravda, 1987. 10. 14)

헝가리 대표는 현 단계의 통합은 제1차 단계의 성질에 불과하며 향후 상품—화폐 단계 구체금융 제도의 개편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쿠바, 베트남, 몽고 대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분업체제의 개편을 지지하고 각국간의 계획의 조정을 주장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CMEA에의 경제적 참여를 통한 자국의 개발—특히 자본주의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 자본집약적 투자가 요구되는 이들 국가의 형편과 동구의 기술집약적 방향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¹⁴⁾

(14) 월남은 특히 콜렉티브 개념에 입각한 협조체제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루마니아의 몇가지 입장은 CMEA의 운영에 관한 지적으로 흥미있다. 루마니아는 CMEA에서 토의되는 문제의 결정에 관해 관심을 표시하는 국가들의 전원일치에 의한 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이는 참가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 기타 국가들의 참여와 결정을 방해해서 안된다는 소련의 입장(Pravda, 1985. 12. 18)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루마니아는 또한 직접연계에 의한 경제협력관계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의 체결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계약관계가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루마니아의 전통적 입장인 국내경제 문제에 기초한 국제적 통상참여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루마니아는 또한 원칙적으로 CMEA행정기구의 축소를 환영하면서도 조직 운영의 민주화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국간 경제협력 조직의 단순화가 지속될 것을 주장한다.⁽¹⁵⁾ 또한 국제 분업체제의 경기적 재심사,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콜렉티브 개념에 입각한 과학—기술은 조금히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특히 개념의 이론적 뒤받침의 결여와 실증적 기의 조금을 지적하였다. 체코 대표는 새로운 경제발전 단계에 부응하는 가격 형성 구조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공업부분 이외에 농업부분에서의 직접 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볼 때 각국은 새로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방법, 범위, 시기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평가리, 체코, 폴란드 등의 국가들이 가격체계의 개혁을 요구하는 반면 루마니아나 비동구권 국가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은 CMEA 협력체제의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체코슬로바키아, 평가리 등도 신중한 의견을 내세웠다.⁽¹⁶⁾

(15) CMEA 제43차 임시회의에서 19개의 조직이 폐쇄되고 6개의 기관이 새로(통합 포함) 조직되었다. 이 결과로 24개의 대표기관, CMEA 서기국과 2개의 연구소로 축소되었다.

(16) 루마니아는 또한 CMEA 국내의 경제협력 이외에도 개발도상국가와의 경제협력의 확대를 주장했다.

2. 동구 제국의 개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EMA의 성공적 경제통합은 동구 제국의 국내 경제 개혁의 집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고르바초프의 소련내 개혁은 동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후사크 정권이 1968년 체코사태 이후 등장한 보수 정권 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식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후사크는 고르바초프의 체코 방문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소련의 정치 경제개혁의 체코에의 도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소련내 개혁은 체코 전역에 광범하고 따뜻한 반응을 일었다. 체코 공산당위원회의 정치국은 소련개혁들의 체코 공산당과 체코 사회에로의 적용에 관해 상세한 검토를 행하였다. 체코공산당은 경제개혁, 정치, 경제와 기타 분야에서의 민주화의 심화, 노동자의 관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¹⁷⁾

비록 후사크 정권의 보수성이 가져올 정치적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 후사크 정권은 제반 개혁의 집행에서 정치적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Radio Free Europe Research, 1987. 6. 26)

폴란드는 1980년 위기 이후 일련의 개혁 조치를 행하는 과정에 있었다. 1982년에는 노동자들의 자치관리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중앙으로부터 의사결정권을 대폭 기업관리층으로 이전하는 법령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계엄령하에서 이러한 법령들은 실제 집행되기 어려웠다. 다만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삭감되어 소비재 가격의 인상만이 이루어졌다.

폴란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상당한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야루젤스키 정권에게 크게 위협적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소련내의 개혁은 폴란드 개혁에 자극이 되는 것 같다. 폴란드는 제2차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전보다 더 강한 집권을 보이고 있다. (Radio Free Europe Research, 1987. 6. 4) 이와 같은 폴란드의 입장은 고르바초프의 폴란드 방문시 행한 야루젤스키의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양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단계와 조건은 다르다. 그러나 개혁의 가속화와 사회주의 활성화 및 개혁정책에는 폴란드와 소련간에 완전한 일치가 존재한다.” (Pravda, 1987. 4. 22)

(17) 후사크의 연설, Pravda, 1987. 4. 10.

불가리아에서의 개혁은 1981년의 「신경제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경제구조는 기업에 자신의 이전을 통해 자치관리조직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 개혁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새로운 경제 개혁에 대한 움직임은 1986년 새롭게 재개되었다. 이는 1985년 고르바초프의 불가리아 방문과 무관하지 않다.

새 개혁의 주된 내용으로부터 중앙·성조직의 해체, 생산목표와 생산요소 투입내용에 대한 중앙에서의 하달 제도 폐지, 경제기관들의 가격결정, 공급 시장의 선택의 자유, 관리인의 노동자들에 의한 선출, 사경제 및 협동체 부문의 증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이 1954년부터 통치해 온 75세의 지브코프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의 불가리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나 자본주의 방식의 도입에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¹⁸⁾

헝가리의 경우 최근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다. 1985년 DNMP(순국내생산)은 하락하였고 1986년의 경우 겨우 0.5%의 성장을 보였을 뿐이다. 무역 적자 규모도 1985년 약 5억불에서 1986년 14억불 규모로 증가되었다. 헝가리의 외채 규모는 1985년 56억불 정도에서 1986년에는 85억불로 늘어났다.

이러한 헝가리의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는 대외적 요인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그 배경에는 헝가리 체제의 구조적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즉, 헝가리 제품의 대외 경쟁력의 제고, 수출이 비환율적 기업에 대한 흑자기업으로부터의 조세수입에 의한 보조 등 보다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헝가리는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개혁 세력의 의견들을 종합·정리하여 1986년에는 35명의 주요 경제, 사회학자들에 의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앙계획 경제로부터의 급격한 이탈을 가정하는 급진적 개혁안이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개혁안의 내용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계획경제의 폐기는 부정적이었다.(RFER, 1987. 7.7:4) 동 개혁의 주요 내용은 세제의 개편, 기업의 자주성 확대, 은행개혁, 임금, 가격제의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Pravada, 1981. 2. 18)

(18) 불가리아 경제개혁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Plan Econ Report. Vol III. No. 34-35, 1987. 8. 27.

동독의 경우 CMFA 가맹국 중 가장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이다. 경제성장의 기록 면에서도 가장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 동독은 이미 공업, 수송, 건설 기업들을 150여개의 대단위 콤바인으로 개편하였다. 이 개편으로 동독은 계획경제와 이의 단점인 기술혁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콤바인은 엄격한 중앙통제에 있으나 콤바인의 지배인은 계획 수집에 참여토록 되어 있다. 콤바인의 경영 원칙에 경제원칙을 보조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독의 전통적인 높은 규율과 의욕과 기술의 축적으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호에카는 소련의 개혁 실천을 모방할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특히 정치적 합축성을 지닌 개혁의 동독에의 영향을 고려, 동독 체제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¹⁹⁾

루마니아의 태도 역시 소련내의 개혁에 냉담하다. 루마니아의 한 관리는, “우리는 이전에 개혁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발전 단계로 보아 우리에게는 중앙집권적 제도가 최상이다.” 또 한 경제학자도 “우리는 중앙집중이나 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²⁰⁾

루마니아는 1978년 「신경제, 재정기구」의 이름아래 분권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동 계획은 노동자의 자치권의 확대와 경제적 유인제도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동 계획은 루마니아의 심각한 외채 지불 위기와 동시기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루마니아는 강력한 외채 지불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이는 경제개혁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체제의 자유화보다는 보다 강력한 「포위경제」로 전락하였다. 차우세스쿠는 분권화를 자본주의의 침투로 간주하고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과 같이 동구 제국들은 자기의 사정에 따라 소련의 경제개혁에 대한 태도와 이의 도입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곧 CMEA에 대한 태도와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동구 제국은 정도의 차이 뿐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CMEA내의 소련의 새로운 운영 방식에 어떠한 형태이든 가담하려는 것이 전반적인 동구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19) Radio Free Europe Research, 1987.3.1.p.2. Vol. 12. No. 12 동독의 반응은 Radio Free Europe Reseach, RAD Background Report 177. 1987.5.8 참조

(20) Radio Free Europe Research, Situation Report(Romanik) 1987.7.21. p.5.

3. 바르샤바 조약기구

CMEA가 동구내의 경제 및 국내문제의 조정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외교정책의 협의기관이다.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의 대외정책은 대체로 국내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전조성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감축, 지중해 비핵지대 설정, 군비 경쟁의 금지 등 소위 신데탕트 시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새로운 외교정책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동구 제국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주로 고르바초프의 평화 공세에 대한 지지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5년 4월 고르바초프 취임 직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조약기구 당·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본 조약의 20년간 연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고르바초프는 미국의 「별들의 전쟁」 계획에 반대, 핵무기 종결, 전략 핵무기의 $\frac{1}{4}$ 의 감축, 중거리 핵무기의 설치 중단을 발표했다.

1985년 10월 소피아에서 열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정치조정위원회」는 상기 소련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소련의 새로운 전략핵무기 50% 감축 안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동시에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들은 구라파로부터의 중거리 및 전술 핵무기의 제거에 대한 적극 지지와 결의를 표명하였다.

동 회의를 소련과 미국과의 핵무기에 대한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동구파와 서구파간의 경제, 과학, 기술 환경문제에 관해 접촉의 확대를 발표하였다. 또한 구라파에서 미·소 양국의 주둔군대의 규모를 1986년 1월 현재로 동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화학무기의 완전 금지, 제거, 전통무기의 감축 등을 주장했다.

끝으로 흥미로운 것은 바르샤바조약 회원들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유대강화를 강조하고 특히 중앙의 “평화와 사회주의”를 환영하였다. (Pravda, 1985. 10. 24)

1986년 6월의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조정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소련의 평화공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첫째, 핵무기 실험의 금지, 둘째, 구라파에서 소련과 미국의 중거리핵미사일의 완전 철수, (영국, 불란서의 핵무기 등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핵무기와 우주에서의 핵전쟁에 관한 美·소의 구체적 합의 촉구, 핵무기의 철폐에 관한 합의, 전통무기의 상호 감축,

군축에 관한 모든 사항의 검증 실시 문제 등에 관해서였다. 동시에 말칸, 동구, 북구, 중공의 비핵지대화, 지중해의 평화·안전, 호의적 협조지역화를 제의하였다.⁽²¹⁾ (Pravda, 1986. 6. 12) 또한 CMEA와 EC와의 협조체제의 강화가 논의되었다.

바르샤바조약기구는 1987년 6월 성명에서 군축과 경제문제 해결의 밀접한 연관성을 밝히고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축지지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중 외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의 근본적 해결없이는 세계평화의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Harare 비동맹국 선언을 지지하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소련의 제3세계 정책이 정치적, 군사적 개입에서 경제적 차원으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Pravda, 1987. 6. 10) 동시에 서구 국가들의 보호무역의 성향에 대한 간접적인 우려의 표명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바르샤바조약기구는 고르바초프 이후 비교적 합의된 외교정책 방향하에서 소련의 대외정책 지지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구 제국들은 소련보다 나아간 평화 공세를 취할 가능성과 동구와 서구의 접촉이 범위와 정도면에서 소련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4. 소련—동구 쌍방관계

소련—동구 쌍방관계에서 특이 할만한 관계는 소련—루마니아, 소련—유고슬라비아 관계이다. 고르바초프 이후 이 양 관계의 변화 추이를 간단히 살펴 본다.

루마니아는 1960년 이후 소련의 외교정책 노선의 이단자로 행세해 왔다. 후르시초프의 「초국가적 경제통합」에 반대했고 소련보다 앞서 서독과의 관계를 수립했으며, 소련의 뜻에 반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었다. 군축문제에서도 소련과 미국을 공동으로 비판, 급진적인 핵무기 설치등을 주장해 왔다. 또한 중·소관계에서 중공을 카드로 삼아 소련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해 왔다. 소련과의 관계에서 사회주의 국가간의 평등원칙을

(21) 동 회의에서 WTO는 향후 1~2년 사이에 지장군과 전술폭격기의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전통군사력 감축안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1~2년내에 양측이 100,000~150,000 규모의 1차 지장군 감축이 제안되었다.

고집해 왔고 Warsaw군사훈련 등에 비협조적이었고 CMEA 경제통합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1987년 5월 고르바초프의 루마니아 방문으로 여러가지면에서 양국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선 고르바초프의 방문은 1976년 브네즈네프의 방문 이래 소련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루마니아 방문 목적은 첫째, 과거 CMEA의 통합에 소극적이었던 루마니아를 경제협력 체계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비록 “이익당사자 참여”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동구 전체와의 관계 정상화라는 큰 목표 아래 루마니아가 제외된다면 새로운 타—일의 사회주의 국제관계의 수립에 나쁜 이미지를 들 수 있다.

둘째, 루마니아로부터의 소련의 외교정책에 관한 일반적 지지의 획득이다. 소련의 핵무기 감축, 비핵지대안, 재래식무기 감축안 등은 루마니아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세째, 소련 국내 개혁에 대한 설명과 루마니아의 이에 대한 지지 및 루마니아 국내 개혁에 대한 영향이다. 고르바초프는 그가 이미 밝힌 사회주의 건설에 독단적 해설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쟈우세스쿠에게 강제적 압력을 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쟈우세스쿠 체제의 경직성에 비판을 가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부카레스트의 만찬연설에서 쟈우세스쿠는 루마니아의 경제개혁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을 상기시키고 소련에서 추진되는 페레스트로이카의 루마니아에의 연관성을 분명히 부정하였다. ⁽²²⁾

양자간, 다자간 경제협력에 관해서도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CMEA 통합 압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외교정책 분야에서 쟈우세스쿠는 소련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전통무기 감축에 대한 역점의 결여를 비판하고 이 분야에서 루마니아의 독자적 정책(일반적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제기구에서 소련과 루마니아의 군축, 경제협력, 자주, 평화 노력을 위한 공동협력을 찬양하였다.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는 간접적으로 루마니아 경제 모델의 문제점을 시사

(22) Radio Free Europe Research, Situation Report(Romanic) 1987. 4. 24 p. 8ff.

하면서 상호 경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비교, 검토를 요청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양국 관계가 새로운 질적 변화를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루마니아의 CMEA 참가를 종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콤뮤니케에서 양국은 국내 경제질서 면에서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주장한 상호 경험의 학습안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쟈우세스쿠는 경제협력과 생산의 문화의 확대에의 찬미 요구에 응한 것은 특이할만하다. 공동 성명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 과학 담당 기구와 협작기업을 세워 각국의 필요화 제 3국에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직접 연계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Pravda, 1987. 5. 28) 이는 과거 루마니아가 소련과의 협작 투자를 거절한 것에 비추어 새로운 변화로 볼 수 있다. CMEA에 관해서 양국은 CMEA조직의 개선에 노력할 것에 합의했으나 그 내용의 동질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다. 중요한 합의 사항은 루마니아가 과거 소련에 외교정책을 비판한 것과 달리 많은 부분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르바초프는 동구의 이단자였던 루마니아를 적극적인 동참자로 끌어들이지는 못했으나 그의 정책의 반대자로 만들지도 않았다. 소련과 루마니아는 최소한의 합의하에 잠정적인 안정 관계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동구정책이 소련의 이데오로기적 우월성을 강요하지 않아 쟈우세스쿠의 독자노선의 명분을 해치지 않은 점과 소련 외교정책의 변형에 의한 동의점을 구하기가 용이해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루마니아 경제의 문제점이 악화됨에 따라 소련 및 여타 동구국가들간의 경제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한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1980년대 루마니아와 소련간의 경제관계는 증대 추세에 있다. 1986년의 경우 1985년 대비 양국 무역은 23% 증가했고 이는 여타 CMEA 국가들과 소련과의 무역이 동기간 평균 2%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것이다. 또한 1986~1990년 기간 동안 양국의 무역은 70%의 신장을 보일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소련의 루마니아 대외무역 비중은 1986년에 30%에 이르렀으며 이로써 CMEA 국가들 중 가장 하위를 면하였다.

기타 루마니아는 소련내에 자원개발의 공동투자에 참여, 소련의 에너지공급의 증대, 소련의 기계·장비의 루마니아 20개 공장에 1990년까지 공급 예정, 루마니아의 소비재 수출 증대—예산 등으로 양국의 경제 관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²³⁾ 이와 관련 루마니아는 1960년대와 달리 국제분업에서 좀 더 동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된 것도 루마니아의 국제분업에 대한 공포를 완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의 관계는 1948년 스탈린이 유고를 코민포름에서 축출하여 사회주의권으로부터 축출한 이래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 되지 않았다. 스탈린 사후 후르시쵸프는 유고와의 “무너진 담장을 수선”하기 위해 1955년 유고를 방문, 1955년 6월 소위 벨그라드 선언을 채택하게 된다. 이로써 잠시 원만해졌던 양국 관계는 1958년에 이르러 후르시쵸프가 유고의 사회주의 국가권에서의 지위를 인정치 않게 됨으로 다시 악화되었다. 특히 유고의 비동맹국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소련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왔다. 고르바초프의 유고 방문 이전 유고의 연방집행위원회 의장 플라린치는 1985년 7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여기서 양국 관계의 진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양국 관계가 주권독립, 영토보전, 평등, 불간섭의 원칙을 완전 준수하면서 전개될 것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또한 1990년까지 「장기경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의 성공적 집행에 주목하였다. 1986~90년간 양국의 계획, 무역 기관간의 협의의 중요성을 상호 인식하였다. 또한 2000년대까지의 과학, 기술 협력방안에 합의하였다. (Pravda, 1985. 7. 8.)

외교정책 분야에서 양국은 핵무기 위협의 제거와 준비경쟁의 종식, 국제 감시하의 엄격하고 실천성있는 일반적인 완전한 군비통제의 구축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반적 합의는 1988년 3월 고르바초프의 유고 방문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 우선 일반 원칙으로 1955년 벨그라드 선언, 1950년 모스크바 선언을 재천명하였다. 이는 플라린치의 방문에서 확인된 것의 재확인인 동시에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선언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에 관한 원칙과도 동일한 것이다. 양국은 구체적으로 당, 정부, 단체, 시민간의 접촉의 확대에 동의하였다.

(23) Radio Free Europe Research, Vol. 12. No. 21, 1987, p. 29.

양국은 사회주의 발전의 다양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1948년 유고슬라비아와 코민포름간의 갈등의 원인이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당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진하는 독립과 자주의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치관리제도에 관해 노동자 자치제도는 각국의 특수 사정에 맞추어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가 자치제도에 관해 축적한 경험과 소련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민의 사회주의 자치관리 제도는 현대의 관리 기능의 수단과 형태에 관한 상호 지식의 확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여 유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외교정책, 제3세계 정책이 개입에 대해 신중으로 전환함에 따라 유고슬라비아가 주가 되고 있는 비동맹국가들의 국제정치적 의미에 대해 상호합의 한 점이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만한 것으로 양국은 전반적이고 성공적인 경제협력 관계가 모든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양국 지도자에 의해 지적되었다. 장기에 걸친 협력체제 전문화의 도입을 위해 양국이 공동노력할 것과 무역 상품내용의 개선, 안정적이고 균형된 무역구조의 유지 등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장기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CMEA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양국이 참여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고르바초프는 취임 이후 동구라파 각국과의 양자간 관계에서 이전보다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자주노선을 취해 왔던 루마니아와 사회주의권에서 소외되었던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를 개선시켰다. 그 개선의 내용은 최소한 경제협력관계의 綱속에 양국을 끌어들인 것이 될 것이고 최대한으로는 양국이 소련의 외교정책 및 국내 개혁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어느 정도 유도해 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개선이 가능한 비유로는 우선 고르바초프 이후의 외교정책 전반과 사회주의 관계 원칙에 대한 융통성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루마니아, 유고 등의 경제 문제의 심각성이 소련과 양동구국가들의 접근을 가능케 한 직접 동인으로 생각된다.⁽²⁴⁾

(24) 유고의 경우 Tito의 죽음과 혁명 2세대의 등장은 지도계층간의 협조를 보이게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V. 맷 음 말

고르바초프의 동구 정책은 소련의 국내 정치, 경제 개혁과 밀접추어 새로운 관계의 모색이라 볼 수 있다. 그의 정책은 한마디로 “기계적 연대”(mechanic solidarity)에서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의 전환이라 볼 수 있다.

유기적 연대의 특징은 경제적 관계의 심화를 들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내의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동구라파 국가들로 하여금 구조적으로 유사한 경제문제의 해결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70년대 서구 자본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동구 경제권내에서의 협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배경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치·군사적 관계보다 소련·동구 사이에는 경제적 관계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눈에 띠고 있다.⁽²⁵⁾

경제적 통합의 방식은 과거와 같은 후르시초프의 초국가적 계획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또한 브네즈네프 시대와 같은 현실적 통합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전보다 평준화된 동구제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문제의 유사성이 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가정에 서 있는 듯 하다.

경제통합의 내용의 특성으로 多次元的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간, 기업간 합작과 전문화를 추진하고 그 참여 형태로는 양자간, 다자간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통합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 경제 분야의 개혁이 정치적 자유화를 수반하지 않을 때 가져온 정치적 위협을 고려, 정치적 자유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이와 같은 위협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그는 정치적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체코나 평가리 사태의 재연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동구 정책의 수행방식상의 특징은 가능한 대화 채널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영수회담, 경제담당 비서회담, 국제담당 사서회담과 다수의 다자간 행정의 체결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계를 동적으로

(25) 소련은 북한을 위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와도 동구에서와 비슷한 계획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구의 경제수준 보다 낮은 아시아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회박하다고 본다. 이는 아—태 지역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로 제도화시키려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르바초프 하의 동구 정책은 이전과 달리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관계의 활성화를 피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충돌되어 왔던 “동구 정권의 존속”과 소련의 통제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유기적 연대”的 구축을 통해 양 목적간의 갈등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구상에 위협이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 소련내의 개혁의 성공 여부가 소련의 동구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동시에 미·소 관계를 중심한 국제 여건의 변화 역시 동구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색된 미·소 관계는 동구내의 개혁과 동구·서구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동구 제국의 유기적 경제 연대에 대한 열의의 차이, 정치적 개혁에 대한 일부 국가의 기본적 태도 등도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중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끝으로 동구내의 정치적 자유화가 국민들의 바라는 수준만큼 진행될 것인지도 고르바초프의 정책의 성공을 가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Brzezinski, I.Z.

1979 *The Soviet Bloc*, Cambridge: Harvards Univ. Press.

Brown, J.F.

1975 *Relation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Its Eastern European Allie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Dawisha, Kárean and Valder, Jonathan

1987 “Socialist Internationalism in Eastern Europe,” *Pwakem of Communism*, Mar.-Apr.

Gorbachev

1987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Haper & Rov.

Plan Economic Report

1987 Vol. III, No. 34-35

Pravda

Radio Free Europe Research

Seton, Hugh-Watson

1953 *From Lenin to Malenkov*